

전남, 성장 동력 확보 '불균형 개선' 나선다

반도체특화단지 탈락·이차전지 미신청...글로벌 경쟁력 확보 힘로
완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부정적...차질 불가피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정부에 재검토, 추가지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토불균형 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전남이 최근 연말이 정부부처 공모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완도에 들어설 서남권 해양문화거점시설인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설립의 첫 단계인 타당성 조사에 걸려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도 탈락,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협로가 예고된 상태다.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기로 광주시와 서로 '약속'했다며 우선한 여건을 갖추고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전남도 판단 착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완도군에 조성하려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 '부적절' 판단을 내리고 해양수산부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해수부는 전남도의 건립 대상지 선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뒤 문제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 왔다.

문체부는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해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구체적인 소장품 확보 계획이 미흡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절'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가 1년 마다 사전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문체부 평가를 통과해야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결국 정부의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만큼 애초 전남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문화유산자원을 토대로 국민들의 해양수산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로만 12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탈락'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미신청'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의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인 철만 1·3지구 일대를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4.5GW·전국 1위)과 생산량(5.52TWh·전국 1위)에다,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

현이 가능하고 부지, 용수,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 등을 갖춘 점, 지역균형발전과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할 최적지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수도권 용인·평택 지역에 밀렸다.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향후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하자는 광주시와의 '약속'을 이유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이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을 앵커기업으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광양에 전기가 100만대에 공급할 9만 t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갖춘데다, 오는 2026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0만 t 규모의 전구체(양극재 원가의 70% 차지) 생산 시설 투자 계획도 밝힌 상태였다. 연간 2만800 t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니켈 생산 공장 건립 계획을 공개한 투자 기업도 있다.

이정도면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항, 전구체 가공 집적단지를 새로 만들어 한 해 전기가 800만대 분량의 전구체를 양산하겠다는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과 견주어 전혀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타입아웃제(60일), 국가산단 지정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판단 착오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한편,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반도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목포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설계, 생산·제조, 인력양성 등 밸류체인 완성,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을 보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전남 권역별 특장점을 활용해 소재 생산부터 제조,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마에 휴가철... 채소값이 금값 25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채소류가 쌓여있다. 최근 채소류는 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없게 되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적상추 도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346.6%, 깻잎은 80.2% 올리는 등 이밖에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상민 탄핵 기각... 행안장관 업무 복귀

현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이태원 대응 중대 위반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한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가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

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면

긴 장마에 각종 사고...시민들 우울감 호소 ▶6면

여자월드컵 콜롬비아전 패배 16강 '암울' ▶18면

임의진의 광주 속살 순례기 - 비아와 침단 ▶22면

금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3년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